

발 간 등 록 번 호

11-1140100-000219-06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11

안전문화와 청렴윤리경영

2023 November | Vol. 131

안전과 기업 거버넌스

서울대학교 박선현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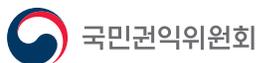
산업안전 정책 사례

인프라개발 산업의 부패와 안전

안전 정책 만들기

안전불감증이 부른 필연적 재난

‘다운폴: 더 보잉 케이스’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23년 11월 1일(매월발행, 통권 131호, 비매품)

발행인: 김홍일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구독신청: 044-200-7163

주소: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민간협력담당관실

110

정부민원안내
부패·공익신고



COVER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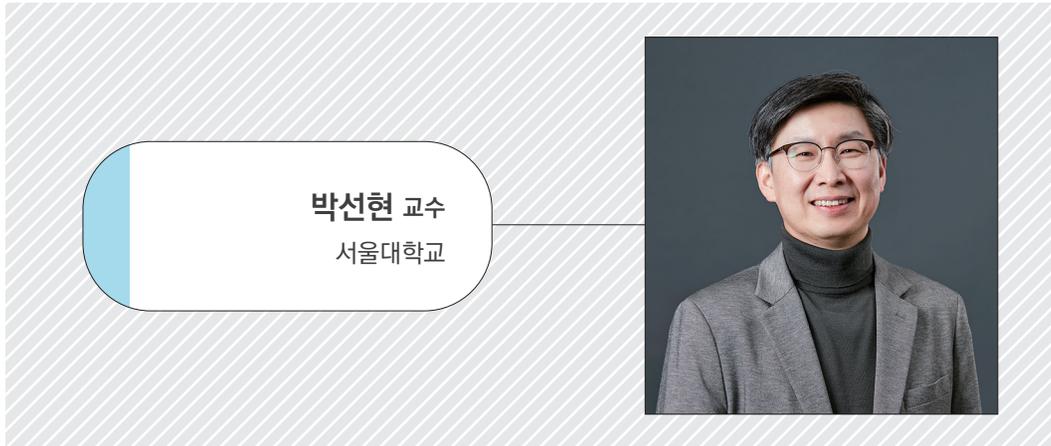
2022년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고, 이듬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마련되었으나 산업재해, 부실공사 등 안전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사회적가치연구소의 '2023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이 가장 집중하는 ESG 경영 이슈는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부족'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부터 연이어 벌어진 건설 현장 사고 등 심각한 산업재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부패는 소비자와 근로자의 안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올해 2월 발생한 튀르키예 대지진 때 부패로 인한 건축물의 부실공사가 재난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꼽혔다. 부패와 안전, 품질은 ESG경영 공시와 공급망 실사 대응의 측면에서도 관리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부패 위험과 관리 방안을 알아보고 기업의 청렴윤리경영을 돕고자 한다.

01	전문가 코칭	04
	안전과 기업 거버넌스 서울대학교 박선현 교수	
<hr/>		
02	사례돌보기	06
	산업안전 정책 사례	
<hr/>		
03	보고서리뷰	12
	인프라개발 산업의 부패와 안전 U4 Anti-corruption resource centre, Overview of corruption and anti-corruption in infrastructure development(2023)	
<hr/>		
04	행동하는 윤리경영	18
	안전 정책 만들기	
<hr/>		
05	문화 속 기업윤리	22
	안전불감증이 부른 필연적 재난 ‘다운폴: 더 보잉 케이스’	
<hr/>		
06	뉴스클립	23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동향 국내외 동향	
<hr/>		
07	웹툰 윤리네컷	26
	근로자의 참여로 만드는 안전문화	
<hr/>		
08	행사소식	27
<hr/>		
09	퀴즈	28



안전과 기업 거버넌스

전문가 코칭



이번 호에서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박선현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안전에 대한 인식과 경영환경의 변화 그리고 기업의 거버넌스에 대한 고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Q1) 최근 안전 관련 이슈, 중대재해법 등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기업환경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며 기업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전에 경영자 수업에서 건설업을 가업으로 이어받은 2세 경영자 학생이 있었는데 그 자신이 건축가였습니다. 신규공장 시설을 설계하면서 관련 법규에 맞추어 작업장 안전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포함시켰다가 창업주인 아버지에게 혼이 났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 다 지켜가면서 언제 돈 버느냐, 나중에 흑시라도 문제가 되면 그때 벌금 내고, 비용 처리하면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한 세대를 지나면서 안전을 대하는 우리의 문화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일화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 기업들이 안전 관련 규제를 비용효율성과 단기수익 최우선 경영의 걸림돌로만 여겨왔다면, 최근 경영환경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지속성장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에 대한 장기적 수익확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환경, 지역사회에 대한 가치창출을 요구하는 ESG 경영이 한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일터에서의 건강과 안전은 이런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첫걸음입니다. 경영자들이 작업장의 안전관련 투자를 단순히 비용으로 여기기보다는, 기업의 지속적 가치창출을 위한 기본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기업이 안전문화를 강화하기 위해 거버넌스 측면에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일터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위험이 존재하며, 한국 경제는 아직까지는 제조업, 건설업 등의 비중이 높아서 작업장의 구조적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재해는 예기치 못한 불행(misfortune)이나 실수(mistake)에서 비롯될 수도 있지만, 조직 내 그릇된 행위(misconduct)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며 이는 체계적인 거버넌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최고경영자의 안전에 대한 믿음과 진정성 있는 태도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이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현장관리자가 아니라 최고경영자에게 묻는 것은 작업장의 잠재적 위험을 미리 발굴, 개선하여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최고경영자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기업에서 최고경영자는 제도 도입과 운영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업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최고경영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가 기업의 장기적 성과와 지속성장을 위한 선결조건이라는 것을 믿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안전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 전반의 문화 개선입니다. 조직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이제는 유효하지 않은 과거의 성공 경험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비용효율성 중심의 선진국 따라잡기 게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공을 거뒀지만, 이런 과거의 성공방정식은 혁신에 기반한 지속적 고부가가치 창출이라는 다음 세대의 과제에 유효하지 않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시스템과 문화를 갖추는 것이 둘러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미래경쟁력을 위한 준비라는 것에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 투자자,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안전 정책 사례

사례돌보기

2022년 1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였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며 경영자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인명 피해는 물론 작업 차질과 함께 기업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이 산업안전을 위해 들이는 비용은 곧 투자이자, 경영의 일부이다.

산업안전 정책은 조직의 크기, 성격, 산업 분야 및 법규 요구 사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정책의 주요 목표는 위험을 관리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실제 산업안전 정책 사례를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산업안전 정책의 중요성과 목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 중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한국원자력연구원 사례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발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집(2022)에서 선정하였다. 산업안전 정책이 근로자와 조직, 그리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 또한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

1. 코오롱인더스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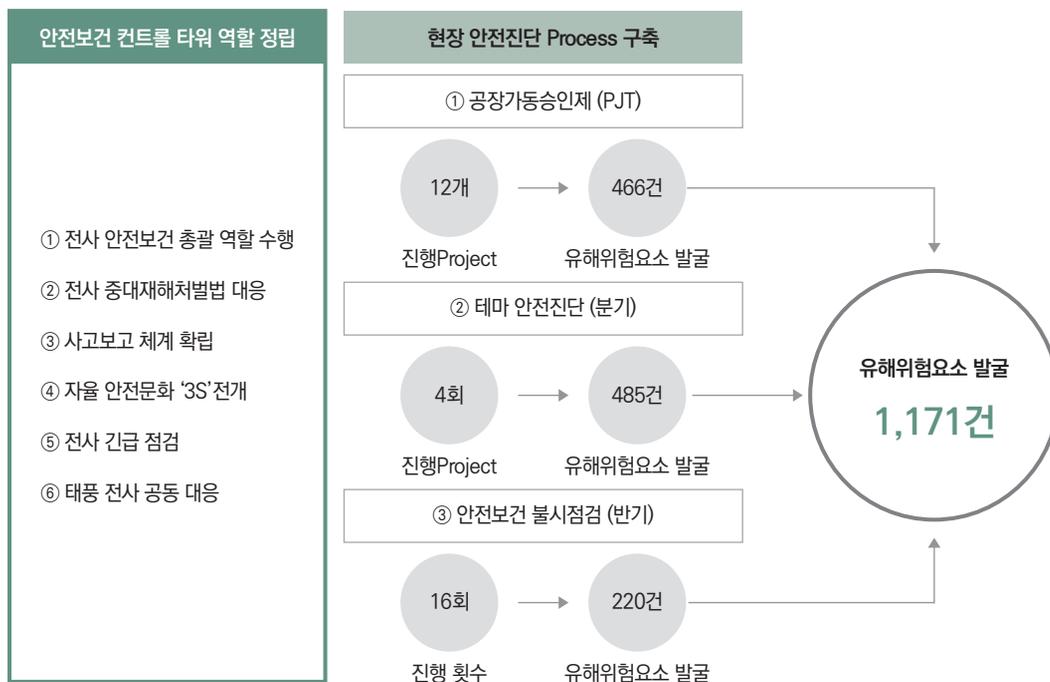
코오롱인더스트리는 화학 및 패션 부문 제조기업으로, ‘5대 핵심전략¹⁾’을 토대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한다. 그 중 환경·안전사고 무재해 사업장 구축은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들의 생명권 존중을 위한 최우선 가치로 여겨지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2022년 1월 안전보건전담조직인 안전보건센터를 CEO 직속 소속으로 신설하고, 전사적 안전보건방침과 목표를 수립하였다. 코오롱인더스트리 안전보건센터는 S&H팀과 안전진단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고, ‘ESH(환경, 안전, 보건) Risk Free’ 체계로 전환하고자 핵심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
- 1) 5대 핵심전략: 2047 Net Zero 달성, 친환경 제품·소재 개발 및 친환경 사업 확대, 환경·안전사고 무재해 사업장 구축, Business Value Chain 전반에 걸친 상생경영, 경영투명성 강화 및 윤리경영 내재화
 - 2) 안전문화 3S 제도: Safety Day(매달 4일 전사 차원에서 실시하는 안전캠페인), Safety Golden Rules (사업장내에서 누구나 지켜야하는 필수 규칙을 선정하고 미준수시 페널티를 부여하는 제도), Safety Talk(회의 첫 순서로 안전을 주제로 간단한 발표 및 토의를 진행)

코오롱인더스트리의 '2022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중대재해 처벌법 준수에 필요한 규정 정비, 안전보건 예비비 편성, 안전문화 3S²⁾제도 전개, 전사 긴급 점검 진행, 태풍 힌남노 전사 공동 대응 등을 시행함으로써 본사 S&H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정립하였다. 또한 공장가동승인제, 테마 안전진단, 안전보건 불시점검으로 구성되는 현장 안전진단 프로세스를 구축하였다. 안전진단팀은 2022년에 각 사업장을 순회하며 1,171건의 유해위험요소를 직접 발굴하였으며, 발굴된 유해위험요소는 개선할 수 있도록 분기별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2022년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코오롱인더스트리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대응〉



출처: 코오롱인더스트리 2022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이처럼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안전에 타협은 없다'는 모토를 최우선으로 추구하고, 모든 경영 업무에서 안전을 먼저 고려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2. 하니웰(Honeywell)

하니웰은 주로 제어 시스템, 자동화 기술, 안전 시스템, 에너지 관리 솔루션 등을 개발 및 제조하는 미국의 다국적 복합기업이다. 하니웰은 미국의 산업보건 잡지인 EHS Today가 주최하는 ‘2021년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기업상(America's Safest Companies)’을 수상한 기업 중 하나다. 하니웰은 매년 CEO와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거친 지속가능한 기회 정책(Sustainable Opportunity Policy)을 전사적 운영체제에 포함하여 모든 시설에 게시하고 모든 직원과 계약자에게 전달한다. 이 정책은 건강, 안전, 환경적인 고려 사항들을 비즈니스의 모든 측면에 통합함으로써 지역 사회와 환경을 보호하고, 규정준수,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생산성 달성, 세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하는 기술을 개발한다는 원칙에 기반한다. 하니웰은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모든 조직 전반에 체계적인 표준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HSEPS(Health, Safety, Environment, Product Stewardship and Sustainability Management System)관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이 관리 시스템은 ISO 45001과 ISO 14001 등 제3자 인증표준에서 요구되는 사항들과 업계 모범사례를 반영하고 있다.

한편, 하니웰은 설계부터 제조, 시장에 이르기까지 제품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 품질과 안전에 초점을 맞춘 전사적인 제품 및 서비스 안전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다. 각 전략 사업부는 다음을 통해 안전 프로세스를 주도한다.

〈하니웰의 안전 프로세스〉

순번	내용
1	목표 및 책임이 할당된 광범위한 안전 정책
2	위험요소의 식별과 위험평가 및 통제를 포함하는 안전위험관리
3	성적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한 안전 보장
4	공식적인 교육 프로그램 참여 및 소통을 통한 안전 증진

출처: : 세일즈포스 공식 홈페이지

또한 하니웰의 안전 및 생산성 솔루션(SPS; Honeywell Safety and Productivity Solutions)은 자동화, 생산성 및 안전에 중점을 둔 광범위한 제품, 서비스 및 솔루션 제품군을 제공한다. 엔지니어, 과학자 및 제품 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SPS 다기능 팀은 단계적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고 SPS 법률 및 규제 팀은 제품 개발에 통합되며 해당 규정을 준수하는 데 지속적으로 중점을 둔다. 이처럼 하니웰은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3.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핵에너지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국가의 에너지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8년에 발생한 2건의 화재사고로 주민과 지자체 등으로부터 사회적 질타를 받았으며, 대외적인 신뢰도가 하락하는 이슈가 있었다. 이 사고 이후 ‘화재 및 연구실 사고 제로화 연구환경 구축’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기관 운영 3개년(2019~2021) 계획에 반영하여 이행하였다.

2022년 12월 30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안전하고 쾌적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보건 경영방침(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Policy)을 공포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순번	내용
1	조직의 모든 활동영역에서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보건법령 및 절차를 올바르게 따른다.
2	매년 안전보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수립, 주기적인 성과관리와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운영한다.
3	효과적인 안전교육과 다양한 소통채널 운영으로 구성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의 생활화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조직의 역량을 강화한다.
4	체계적인 위험성평가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제거하여 연구원의 사회적 안전 확보 책임을 이행한다.

출처 : 한국원자력연구원 2022년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안전보건 경영방침으로 인한 주요 성과로는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한 연구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과 이해관계자 및 지역주민의 안전까지 함께하는 안전관리체계 마련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가치가 실현된 것이 있다.

또한 2022년도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유해·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어서 범국민적인 안전 눈높이에 부응하고자 한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요건에 따라, 안전·보건 활동을 [P(계획수립) - S(지원) - D(실행) - C(점검) - A(개선)]의 선순환 사이클로 운영하며 경영과 일체화를 통한 안전 경영을 실현하고 있다.

참고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2021)
-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집(2022)
- 코오롱인더스트리 공식 홈페이지
<https://www.kolonindustries.com/kr/main>
- 코오롱인더스트리 2022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https://www.kolonindustries.com/file/view?fileSeq=7106&fileOrd=3>
- 한국원자력연구원 2022년 안전경영책임보고서
<https://alio.go.kr/download/dfile.json?fileName=2022%EB%85%84%EB%8F%84+%EC%95%88%EC%A0%84%EA%B2%BD%EC%98%81%EC%B1%85%EC%9E%84%EB%B3%B4%EA%B3%A0%EC%84%9C.pdf&submissionNo=2023041009761851>
- 한국원자력연구원 공식 홈페이지
<https://www.kaeri.re.kr/>
- 하니웰 2023년 ESG Report
<https://www.honeywell.com/content/dam/honeywellbt/en/documents/downloads/hon-esg-report.pdf>
- 하니웰 공식 홈페이지
<https://www.honeywell.com/us/en/company/health-safety-environment>
- 하니웰, Health, Safety, Environment, Product Stewardship and Sustainability (HSEPS) Management Systems Manual
- EHS TODAY, “America’s Safest Companies 2021: Honeywell”(2021.10.21)
<https://www.ehstoday.com/americas-safest-companies-awards/article/21179023/americas-safest-companies-2021-honeywell>



보고서리뷰

인프라 개발산업의 부패와 안전

■ 보고서: U4 Anti-corruption resource centre, Overview of corruption and anti-corruption in infrastructure development (2023.3.24)

노르웨이 비영리연구기관 Chr. Michelsen Institute의 U4반부패 자원센터와 국제투명성기구는 공동으로 ‘U4 헬프 데스크’ 운영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반부패 관련된 질문들에 답변을 해주는 업무를 해오고 있다. 위 기관들이 발행한 보고서 ‘Overview of corruption and anti-corruption in infrastructure development(2023.3.24)’는 U4 헬프 데스크에 접수된 인프라 개발사업(사회·공공 기반시설 개발산업, infrastructure development) 부패에 대한 질의와 관련 답변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들 산업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부패와 개선 방안을 소개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프라 개발산업의 부패는 인프라의 품질, 프로젝트 비용, 완공 및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시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부패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광범위한 반면 프로젝트의 복잡성, 공공조달 영역에서의 불투명성, 감사 과정에 들어가는 많은 비용으로 인해 부패 관행을 적발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부패는 인프라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작업자를 비롯한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이번 보고서 리뷰에서는 그 중에서도 인프라 개발산업의 부패에서 야기되는 안전과 품질 문제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 및 담당자가 안전과 연관된 부패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인프라 프로젝트의 부패 악영향-안전 및 품질

뇌물수수, 편애, 연고주의와 같은 인프라 프로젝트 내 부패 관행은 ‘부적절한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보고서는 ‘부적절한 계약자’에 대해 인프라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자격, 전문성, 경험이 부족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표준 이하의 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 계약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한 계약은 인프라 품질 저하를 야기하여 노후화 및 높은 유지보수 비용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한 구조 불량은 붕괴 사고 및 부상과 같은 안전위험을 초래하여 시민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저품질 자재가 사용되어 인프라가 구조적으로 불량한 경우 인해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건축물은 특히 자연재해에 취약할 수 있다. 이는 지진 후 발생하는 수 많은 사건 사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계약업체가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 안전규정을 무시하는 경우, 안전규정의 미준수, 인증받지 않은 자재를 사용, 안전 장비 미제공 등 안전 위험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

만약, 검사관(Inspector)이 뇌물을 받은 경우, 위험요소를 묵과함으로써 안전검사 결과를 훼손할 수 있으며, 안전 검사 자체가 시행되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패로 인해 도로가 가드레일이나 조명 없이 건설되거나 비상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 등 필수적인 안전장치 없이 기반시설 사업이 완료될 수 있으며 안전 개선도 지연될 수 있다.

인프라 프로젝트의 부패 위험 요소

1. 장기적이고 복잡한 대규모 프로젝트

이러한 프로젝트에서는 작은 비율의 투자로도 상당한 부패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부패에 취약하다. 장기적 투자의 경우, 부패의 이익은 초기에 나타나는 반면, 비용은 나중에 발생하여 최종 제품의 품질 평가가 어렵다. 또한 복잡한 프로젝트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아 모니터링 및 규제가 어렵다. 더욱이, 복잡한 인프라 프로젝트에는 고도로 전문화된 기술과 역량이 필요할 수 있어 품질 저하 및 납품지연, 위법행위 등을 감지하기 어렵다. 전문화된 기술과 역량은 독점력 형성과 가격 책정을 가능하게 한다. 복잡한 재무구조를 이용해 하도급 계약에 잠재적 이해상충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하는 경향도 있다.

2. 시일이 촉박한 프로젝트 기간

인프라 프로젝트는 종종 급하게 진행되는데 이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고 감독기관이 모니터링을 불성실하게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계약 주기의 투명성, 시민의 감시 등 부패방지장치도 종종 무시된다. 특히 조달과정에서의 투명성 부족은 입찰담합, 담합, 특정계약자 또는 공급업체에 대한 편애 등 부패 관행을 야기한다. 이는 결국 가격 부풀리기, 자재 및 제작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조달과정은 '국가 안보'와 같은 이유로 그 불투명성이 정당화될 수 있으나, 그러한 프로젝트 운영은 정치적 리더십이나 네트워크, 우선순위의 변화로 중단 및 취소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자원의 낭비와 부패의 배경을 제공할 수 있다.

3. 취약한 국가 거버넌스

법률 및 규제 프레임워크와 제도적 역량 측면에서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국가의 취약한 거버넌스 시스템은 공무원, 계약자, 인프라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타 행위자들이 부패할 여지를 주며, 그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게 한다. 초국가적 기관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정부의 책임과 권한은 더욱 분산되는 경향이 있다.

인프라 프로젝트 주기 전반에 걸친 부패 위험

보고서에 따르면 부패는 인프라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그 위험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일부 유형의 부패 위험에서만 개선 노력이 이루어지면 부패는 다른 단계로 옮겨갈 수 있다. 이에 따라 단계에 따른 다양한 완화 전략이 필요하다. 인프라 프로젝트의 주기는 '(1)착수단계-(2)준비단계-(3)물품조달단계-(4)계약이행단계-(5)운영·유지단계-(6)처분단계'로 진행된다.

보고서에서는 프로젝트 각 단계에 따라 부패 식별과 완화 조치(Mitigation measures)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그 중에서도 안전 및 품질과 연관된 부분을 발췌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착수단계

프로젝트 착수 단계에서는 공공의 최우선 수요가 충족되도록 프로젝트를 계획해야 한다. 건전한 공공투자 관리를 위해 프로젝트 개발, 평가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 객관적 선정의 프로세스를 거쳐 구성되어야 한다.

- 부당한 영향력 및 정치적 간섭: 착수단계에서 부당한 영향력과 과도한 정치적 간섭은 인프라 프로젝트의 정책 방향과 전략적 계획을 좌우할 수 있다. 먼저, 정치적 간섭은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권력을 이용해 비용 편익 분석 등의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 개인적 이득에 따라 프로젝트 추진 결정에 영향을 미칠 때 발생한다. 때문에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개인적 인맥이나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회적으로 이익이 거의 없는 '하얀 코끼리(white elephant)³⁾' 프로젝트가 승인되기도 한다.

[완화 조치]

- 프로젝트 선정 시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s)을 조절할 수 있는 절차 수립
- 인프라 산업 전반에 대한 부패 위험 평가를 통해 정치적 압력을 고려한 위험 완화 계획 필요
-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협의체 장려

2) 고대 태국에서는 하얀 코끼리가 신성한 동물로 여겨져 노동을 시킬 수 없는 반면, 기르는데 많은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왕이 마음에 들지 않는 신하에게 하얀 코끼리를 선물하는 관습이 있었다. 이것이 서구사회로 전래된 용어로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투자를 했지만 운영이나 유지 및 관리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산이나 사업을 가리킨다.

2. 준비단계

인프라 투자는 적절한 법률에 따라 설계되어야 하고, 광범위한 사전 평가와 투자 계획을 통해 준비되어야 한다. 이 단계는 인프라 투자의 경제적 가치를 보장하는데 중요하지만 여기서도 부패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 투자평가: 인프라 프로젝트는 기술, 재무 타당성 조사, 환경 및 사회적 영향 평가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전반적인 비용 대비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가 불완전하거나 프로젝트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내용을 서류상에서 최소화하려고 조작할 경우 부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의 초과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거나 수익이 낮아질 수 있다.
- 과도한 자금 조달 및 부풀려진 예산: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조달도 부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프로젝트 설계: 프로젝트는 계약자의 이익을 늘리거나, 특정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부패로 인한 조작이 가능하도록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정확하게 설계될 수 있다. 이는 비용 부풀리기, 지연, 품질 저하, 잠재적 부패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완화 조치]

-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 및 타당성 조사 등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와 관련된 부패 위험 관리 필요
- 설계 시 시민사회의 참여 및 항시 소통할 수 있는 협의체 지정

3. 물품조달단계

보고서에 따르면 조달 프로세스는 특히, 복잡성과 다양한 취약점 때문에 부패에 가장 취약한 단계로 간주된다. 조달영역에서의 부패는 선호하는 입찰자에게 계약을 몰아주기 위해 발생한다.

- 광범위한 하도급: 계약에는 하도급 콘텐츠의 극단적인 비중만 포함된다. 기술 또는 재정능력이 약한 계약업체는 자격이 부족한 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고, 이로 인해 작업지연, 비용 초과, 품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완화 조치]

- 프로세스 주체 간의 직접적 접촉 방지
-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 부여
- 비공개/직접 입찰 등의 정당한 입찰 절차 수립

4. 계약이행단계

프로젝트의 이행단계에서는 기술자와 구매담당자들을 감독하여 계약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 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독이 느슨해지면 다음과 같은 부패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 자재의 횡령 또는 유용: 계약업체가 비용을 절감하고 차액을 챙기기위해 표준 이하의 자재를 사용하거나, 필요한 품질 관리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지정된 것보다 적은 장비를 공급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안전하지 않거나, 신뢰할 수 없거나, 고장나기 쉬운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다.
- 유령작업자: 급여명세서에 등록되었으나 실제 프로젝트에는 참여하지 않는 작업자로 부패한 공무원, 계약업체가 근로자 수와 급여지급액을 부풀려 유령작업자의 급여를 챙기는데 이용된다. 이는 전체 비용을 증가시키지만 실제 시공에는 적은 자원이 사용되므로 작업 품질을 떨어뜨리고 일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

[완화 조치]

- 계약서 내용: 이행요건 및 책임, 시공 및 지불조건 정확하게 기술하여 포함, 부패 방지 조항 도입
- 계약업체가 기준에 못 미치는 작업을 숨기거나 부당하게 사업이 지연되지 않게 하는 관리 감독
- 잠재적 부패에 대한 조사.

5. 운영·유지단계

이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자금횡령, 뇌물, 서비스 제공업체 간 담합과 같은 부패 위험이 나타난다.

- 자금유용: 인프라 프로젝트의 유지 및 운영자금을 횡령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의 완전한 방치로 이어져 심각한 피해나 인명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 유지보수 계약의 부패: 유지보수 계약에서의 부패는 유지보수 담당자의 태만 또는 무능함을 야기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비스 수명을 단축하고, 유지보수 비용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

[완화 조치]

- 인프라 품질 정보 수집(클라우드 소싱,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및 공개
- 연례 성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일반인도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
- 공공인프라 자산 운영과 유지보수 계약 입찰 시 부패방지 조치

참고

- U4 Anti-corruption resource centre, Overview of corruption and anti-corruption in infrastructure development(2023.3.24)

안전 위험을 유발하는 유착 등의 부패를 해결하는 데에는 내부 신고가 도움이 된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안전과 부실시공 및 전관유착 근절을 위해 부패/공익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국민 누구나 본인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부패/공익침해 행위 관련 증거 자료 등을 기재해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부실시공 및 전관유착 부패/공익신고 접수 안내〉

- 신고대상:
 - LH 퇴직자가 관련된 설계·시공·감리 업체가 LH가 발주한 사업에 참여해 부실시공 발생.
 - 발주·설계·시공·감리 소홀 및 불법 하도급 행위.
 - 건설업 면허 및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등 공공주택사업 전반(발주, 입찰,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 전 분야)에서 유발되는 부패/공익침해행위.

- 신고방법:
 - 방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소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소재)
 - 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팩스: 044-200-7972
 - 인터넷: '청렴포털' 누리집(<http://www.clean.go.kr>)

- 상담전화: 국번없이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1398

※ 신고자 보호제도: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공익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등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합니다. 비밀보호 장치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신고자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부 공익신고자는 비용 부담 없이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 가능합니다.

※ 안전과 관련된 개선 요청, 제안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접수



행동하는
윤리경영

안전 정책 만들기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는 미국 노동부 산하의 직업안전 위생국으로 안전 표준을 설정 및 시행하고 훈련, 봉사 활동, 교육 및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OSHA는 기업들이 안전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시행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정책샘플, 가이드,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 중 하나인 ‘Communicate Your Commitment to a Safety and Health Program’ 보고서는 안전 정책 작성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에 의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2022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이 중요해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영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기업이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이행하여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이번 행동하는 윤리경영에서는 OSHA에서 제공하는 정책 샘플과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2021)'를 참고하여 안전에 대한 경영자의 의지와 안전보건 프로그램의 기반이 되는 정책을 구축방법을 정리함으로써 거버넌스 측면에서 기업의 구체적인 안전경영 실천 방법에 대해 접근하고자 한다.

먼저,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북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요소로서 다음의 7가지 사항을 꼽는다. OSHA보고서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그 중에서도 '경영자 리더십'은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7가지 핵심요소와 주요 실행전략〉

1. 경영자 리더십	경영자가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2. 근로자의 참여	모든 구성원이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3. 위험요인 파악	작업환경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찾아내야 한다.
4. 위험요인 제거 대체 및 통제	위험요인을 제거·대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5. 비상조치계획 수립	급박히 발생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6.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의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한다.
7. 평가 및 개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야 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2021)

1 경영자 리더십 실행전략

고용노동부의 가이드에서 제시하는 경영자 리더십 차원의 안전보건정책 실행전략은 크게 세가지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1. 경영방침과 목표설정

안전보건증진·유지를 핵심적인 경영방침으로 하고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경영방침을 담은 동영상·문서를 인트라넷 게시판, SNS를 통해 언제나 확인 가능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하청업체 파견업체, 공급·판매업체에도 이를 알림으로써 안전보건 경영방침 실천의지를 강화할 수 있다. '재해예방 활동'을 중심으로 목표를 정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사업장 내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는 경우 안전보건 확보방안도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만약, 해당 작업과 연관된 수급인 등이 있다면 수급인에게도 알리고 협의해야 한다.

2. 시설확충과 인적자원 배정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 조직(담당자)의 제안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구성·재편해야 한다. 대기업의 경우, 안전보건 담당조직을 경영자 직속 기구로 배치하고 중소기업은 정부의 기술지도사업,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 등 외부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를 위한 시설·장비 확충, 안전보건 담당자 배치, 비상조치 계획 수립·훈련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3. 구성원의 참여 독려

먼저,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충분한 인력이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하면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만의 업무가 아닌 모든 경영자와 관리자의 기본적인 업무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사내 규정(안전보건관리규정 등)에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성원의 권한과 역할을 규정해야 한다. 또한 현장 작업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하며 적극적인 참여자를 격려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만약, 위험요인을 신고한 구성원에게 불이익·부담이 발생하면, 적극적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 안전보건 정책 작성법(경영 리더십)

OSHA의 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정책 구성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한다.

- 1) 안전과 건강에 대한 경영진 및 관리자의 가치, 헌신, 접근 방식을 반영하는 정책초안 작성
- 2) 정책 초안에 대한 피드
- 3) 서명 및 날짜 기재

또한 OSHA는 건전한 정책을 구성하기 위해 다음의 샘플에서 제시하는 네 가지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포함할 것을 권장한다. 이러한 예시는 참고 사항일 뿐 정책은 실제 비즈니스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확정된 것이 아니다. 정책은 정책의 영향력, 비즈니스가 처한 환경,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요구된다.

〈안전에 대한 경영 리더십 정책샘플〉

1. [안전과 건강의 중요성 및 이유]: 비즈니스에서 안전과 건강의 중요성 설명

예시: “직원의 안전과 건강은 사업 운영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안전과 보건의는 우리 회사의 모든 작업에서 중요한 요소여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안전 및 보건 프로그램을 통해 부상과 질병의 발생을 절대적으로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모든 안전 및 보건법을 준수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영진은 모든 작업 영역에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것입니다.”

2. [직장 내 안전과 건강에 대한 접근 방식]: 직장 내 부상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접근 방식

예시: “우리의 안전·보건 프로그램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해당되는 항목 모두 포함)”

- 안전하지 않은 작업 조건이나 관행을 개선하고, 건강 위험 관리, 모든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표준을 완전히 준수하기 위한 안전·보건 검사 프로그램
- 모든 직원에게 업무 환경에 맞는 안전·보건 관행 교육
- 적절한 기계적, 물리적 보호 장치 제공
- 필요한 개인 보호 장비와 그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지침 제공
- 모든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로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향후의 사고방지

3. [역할과 책임]: 안전보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근로자와 관리자의 역할

예시: “경영진은 직장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안전보건 프로그램은 일부 책임을 공유할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해당되는 항목 모두 포함)”

- 최고 경영진은 안전보건 프로그램의 리더십, 효율성 및 개선, 안전한 여건 제공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감독자는 자신과 감독 대상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올바른 사고를 길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작업을 수행할 때 감독자는 자신을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모든 정책, 절차,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준수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항상 안전을 실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와 사용하는 도구, 장비, 자재에 대한 전문가다. 따라서 우리는 근로자들이 안전·보건 문제를 보고하고 작업장의 안전 개선을 위한 제안을 하도록 권장합니다. 감독관에게 직접 보고하거나 제안을 통해 익명으로도 제보할 수 있습니다.”

4. **[작업 중단과 근로자 보호]**: 안전 및 건강 문제로 작업 중단 혹은 문제 제기 시, 해당 근로자에게 보복이나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

예시: “우리는 직원들이 안전하지 않은 작업이나 행동을 목격하면 작업을 중단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행동하는 모든 사람의 용기를 소중히 여깁니다. 작업중지 조치가 취해지면 서면조치에 따라 경영진에 알리고, 위험을 조사 및 시정하고, 이를 통해 배운 교훈에 따릅니다.”

“어떤 직원도 안전하지 않거나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직장에서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안전 위험을 보고하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작업의 중단에 대해 어떠한 보복, 조롱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 **[비즈니스, 산업 또는 직장과 관련된 추가 설명 작성]**

* **[초안 정책에 대한 피드백]**: 위의 질문들과 그 밖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작성하여 정책 초안을 만들면 이를 팀과 공유하여 피드백을 받아야 합니다. 수정된 정책이 만족스럽다면 서명과 날짜를 기재하여 회사의 모든 구성원에게 배포합니다.

[서명]

[날짜]

참고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2021)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집(2022.8)
- 관계부처 합동, ‘중대재해처벌법’ 관계부처 해설 모음집(2022)
- OSHA, Communicate Your Commitment to a Safety and Health Program
https://www.osha.gov/sites/default/files/Activity_Management_Leadership_2_Write_Policy.pdf



문화 속
기업윤리

안전불감증이 부른 필연적 재난, 다큐멘터리 ‘다운폴: 더 보잉 케이스’



*이미지출처 DAUM영화

2018년 10월 29일 인도네시아 수카르노 하타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비행기가 13분 만에 바다로 추락해 탑승자 189명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추락한 항공기의 제작사인 '보잉'은 기체결함이 아닌 조종사의 조종 미숙을 주장했다. 사고가 발생한 비행기를 운영했던 항공사인 라이언에어와 조종사가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5개월 만에 아디스아바바 볼레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에티오피아 항공비행기가 이륙 6분만에 추락하는 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 앞선 두 사건에서 운행되던 비행기의 기종은 모두 보잉 737 MAX 8 모델이었다. 이에 기체의 결함 문제가 지적되었고 미국 연방항공청(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다운폴: 더 보잉 케이스’ 다큐멘터리는 위 두 사건의 전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FAA(미국연방항공청)의 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고원인은 737MAX에 새롭게 탑재된 MCAS(Maneuvering Characteristics Augmentation System, 실속(속도를 잃음) 방지 시스템)라는 장치의 결함이었다. “MCAS가 무엇인가?” 조사결과는 항공사와 조종사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신기술이 항공기에 탑재되면 필수적으로 이를 조종사들이 교육받고 숙지해야 하는데, MCAS에 대한 안내와 교육이 없어 그 존재조차 몰랐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보잉의 항공기 판매정책과 연관이 있다. 당시 시장점유율에서 보잉을 앞질러 나가던 에어버스와 경쟁하기 위해 보잉은 기존의 모델을 개선한 737MAX를 출시하면서 의도적으로 MCAS의 존재를 숨겼다. 그 이유는 연방항공청의 빠른 허가를 받기 위함도 있었지만 기존모델에서 크게 변경된 부분이 없어 항공사들에 막대한 비용이 요구되는 ‘조종사 교육이 필요 없다는 점’을 셀링 포인트(Selling Point)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보잉의 경영진의 경영에 따라 안전을 대하는 조직문화가 변화하는 모습이다. 보잉은 안전으로는 업계 표준이라고 할 정도로 안전성으로 신뢰받는 기업이었다. 과거 보잉에서 근무했던 엔지니어와 품질 감독관 등은 직원들은 우려사항이나 문제에 대한 의견제기가 일상이었으며, 문제제기가 없으면 그것이 문제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1996년 맥도널 더글러스와의 합병으로 새로 온 경영진이 안전보다 주가와 기업의 재무적 수익을 더 중시하면서,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는 사라졌다. 한 근무자의 작업품질을 관리하는 사람을 15명에서 1명으로 줄였으며, 근무자의 문제제기는 무시되었다. 에티오피아항공 사고발생 11일 전에 보잉과 연방 항공청이 이같은 평가를 MCAS시스템에 대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무시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과연 기업의 재무적 이익 증대는 안전을 무시해야만 달성할 수 있을까? 경영진이 바뀌기 이전의 보잉이 안전성으로 신뢰받고 업계 1위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면 오히려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가 이유를 창출 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이러니하게도 매출확대를 위한 결함은폐와 MCAS를 교육하지 않는 판매전략으로 보잉은 형사소추를 유예하기 위해 2억 5000만 달러 벌금, 고객 항공사에 대한 보상으로 17억 7000만 달러, 유가족 배상으로 5억 달러 등을 지불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 산업안전보건청(EU OSHA)가 2014년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에 투자한 비용과 편익을 조사한 연구가 있다, 연구 결과 13곳 중 11곳이 4년 내에 투자비용을 회수했고 나머지 2곳도 작업조건과 이익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가 사고감소 뿐만 아니라 생산성과 품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사회적으로 ESG경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영자의 안전보건관리는 ESG공시의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기업의 ESG경영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한다면 적극적인 안전보건경영을 실천해 보면 어떨까.

참고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2021)
- 매일노동뉴스, “다운폴: 안전불감증의 발생기전”(2022.4.14) |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394>
- 오마이뉴스, “결국 돈이 문제였다, 여객기 추락 사고의 전말”(2022.3.14) | https://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818050&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 한겨레, “미 연방항공청-보잉, 737맥스 결함 알고도 뭉개”(2019.3.18) |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886374.html>



뉴스클리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동향

한-베트남, 반부패 '협력의 장(場)' 마련



국민권익위원회는 10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와 반부패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진단 및 부패 취약요인 발굴·개선을 유도하는 제도인 '종합청렴도 평가' 추진체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운영 현황 등 주요 청렴 정책 추진과제에 대해 공유했으며, 베트남 중앙내무위는 베트남의 반부패 정책 추진 방향과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양국의 향후 반부패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권익위는 2010년 2월

베트남 중앙내무위와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를 최초로 체결한 이래 현재까지 활발한 반부패 협력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베트남 중앙내무위 보 반 중 부위원장은 "지난 10여 년간 국민권익위로부터 전수받은 다양한 반부패 정책 및 제도 경험은 베트남 반부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큰 도움이 됐다."라며, "이번 협력회의를 바탕으로 양 기관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10월 23일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47096

권익위, 공공기관 감사관회의 개최... '카르텔 부패 해소' 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9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감사관회의를 열고 '카르텔 부패' 해소를 위한 3대 중점 과제와 올해 하반기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및 주요 공직유관단체 감사관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카르텔 부패 해소를 위한 3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그 내용으로는 ▲ 공공기관 퇴직자의 전관 특혜 등 공공·민간 접점 부패 ▲ 이권 카르텔에 의한 공공 재정 낭비·누수 ▲ 청년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키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등이 있다. 또한 권익위가 진행 중인 공공주택사업 부패·공익침해 집중 신고 기간과 공직유관단체 채용 실태 점검 내용 등이 감사관들에게 소개되었다. 권익위원장은 "카르텔 부패는 국민 생활이나 정부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카르텔 부패 해소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노력이 있어야 하며, 각급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2023년 9월 12일

<https://www.yna.co.kr/view/AKR20230912134800001?input=1195m>

국내외 동향

국민 10명 중 4명 ESG '안다'...'안전사고 예방' 관심



9월 19일 비영리 재단법인 사회적가치연구소가 공개한 '2023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보고서(국민 1000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4명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31.9%로 전년 대비 12.2% 증가하는 등 ESG를 인지하고 이해하는 국민들의 비율이 크게 늘었다. 국민들이 가장 집중하는 ESG 경영 이슈는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부족'으로 지난해부터 발생한 건설 현장 사고 등 심각한 산업재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국민이 주목하는 이슈 2위는 부정부패 및 뇌물수수, 3위는 대체 에너지 개발 기술 부족이다. 국민들은 대기업의 ESG 경영과 관련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ESG 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지난해에는 부정 평가 비율(-13%)이 더 높았으나 올해는 긍정평가 비율(긍정-부정)은 12.6%로 높아졌다.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ESG 경영 이슈는 임직원 훈련 및 교육, 공급망 관리 및 평가, 지역사회 참여 순이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은 투자 시 고려하는 ESG 이슈는 온실가스 배출 및 대기오염 관리(14.18%),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및 위험 평가(11.49%), 지역사회 기여 및 공헌(11.32%), 제품 품질 및 안전(11.23%), 친환경 제품 개발 및 특허 획득(10.63%) 등 순이었다.

- 한국경제 2023년 9월 19일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309188053b>

ESG 공시 의무화 2026년 이후로 연기...“기업 요청 고려”

2025년으로 예정돼 있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가 연기된다. 금융위원회는 10월 19일 ESG 공시 의무화 시기를 2026년 이후로 미룬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ESG 금융 추진단 제3차 회의에서 “주요국 ESG 공시 일정을 고려해 국내 도입을 2026년 이후로 연기하겠다”며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기업들은 관련 인력과 인프라가 부족하고 명확한 기준도 없다는 점 등을 들어 2025년 공시 의무화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해왔는데 금융위는 이러한 기업들의 요청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EU 등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가 지연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금융위는 향후 ESG공시를 도입할 때 기업들의 준비 상황을 고려해 대형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도입 초기에는 공시 위반에 따른 제재 수준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 한겨레 2023년 10월 16일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112342.html>

EU, ESRS 부문별 표준 채택일 2년 연기... 기업 부담 경감 목적

10월 19일 유럽연합 위원회는 2024년 주요 정책 방향인 '불필요한 행정 절차 간소화' 이행 방침 중 하나로 산업부문별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ESRS) 채택 기한을 연기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업종과 무관한 ESRS 첫 번째 표준 세트는 2024년 1월 이후 약 5만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반면, 산업별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ESRS의 두 번째 표준 세트는 2024년 6월 20일 채택 예정이었으나, 이번 발표로 2년 연기될 예정이다. EU 위원회는 중복적인 보고 통합, 디지털화 확대 등,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보고 요건 부담을 25%까지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CSRD추진 일정 지연과 산업 부문별 ESRS 도입 시기 연기 역시 기업들과 금융업계의 불만이 반영된 조치라고 블룸버그는 분석한다. 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상장 중소기업들을 포함한 CSRD 대상 기업들은 도입일 연기로 2023년 7월 31일 채택된 ESRS 첫 번째 세트의 이행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며, EFRAG(유럽 재무보고 자문그룹) 또한 부문별 ESRS 개발 시간을 확보, 요구하는 정보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보고 요건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EU 기업, 즉 외국 기업에 적용되는 ESRS 채택일도 연기될 예정이다. EU 역내에서 거래하는 외국 기업 대상의 ESRS 도입일 또한 2024년 6월 30일에서 2년 연기된다. 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보다 효과적인 ESRS 개발을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한편, EU에서 실질적인 기업활동을 하는 외국 기업의 최상위 모기업들이 ESRS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2028년 회계연도에 앞서 외국 기업들이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Bloomberg 2023년 10월 19일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10-19/eu-proposes-delaying-some-esg-reporting-rules-amid-opposition#xj4y7vzkg>
- 임팩트온 2023년 10월 23일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123>

금융권 국감 끝...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논의 재개될까

올해 국정감사가 종료되고 다음달부터 국회의 법안심사가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중점 금융법안 처리에 다시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10월 28일 금융위원회의 국감 제출 자료에 따르면 15개 중점추진 법안 가운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다룬 보험업법을 제외한 14개 법안이 아직 처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11월부터는 정기국회 일정에 따라 법안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금융 분야 중점법안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이 법안은 개정안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책무구조도'를 각 금융회사가 도입토록 하고 CEO에게는 회사 내에서 장기간, 반복적·조직적 또는 광범위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적 실패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한다. 지난해 은행에서 발생한 700억원대 횡령사건을 비롯해 금융권 전반에서 대형 금융사고가 잇달았기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는 금융사의 미비한 내부통제가 주요 화두였다. 그런만큼 법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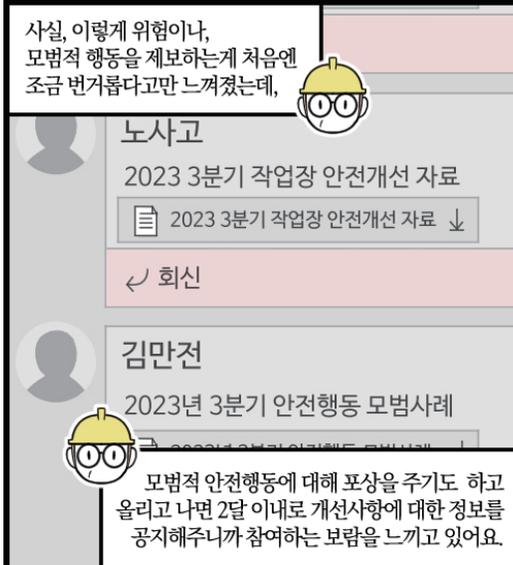
- 뉴시스 2023년 10월 28일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027_0002499082&clD=15001&pID=15000



근로자의 참여로 만드는 안전문화

웹툰

윤리네켓





행사소식

제1회 글로벌 리더스 포럼(Global Leaders Forum)2023

"민주주의, 디지털 권리장전을 선포하라! 인간과 기술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이틀간 진행되는 포럼으로 ESG, 글로벌 지정학, AI, 기후변화, 민주주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ESG는 21일 세션 6에서 ESG, 자본주의의 새로운 출구라는 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주최 TV조선
일정 2023년 11월 20일(월)-2023년 11월 21일(화)
장소 워커히호텔 서울(비스타홀, 그랜드홀)
참고 <https://glfchosun.com/>

2023 ESG 경영혁신 포럼

ESG 전환 시대,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2024년 국내 기업이 마주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과제를 도출하고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포럼으로 탄소노미(녹색 분류체계) 정보 공시, 공급망 ESG 관리, 그린워싱 리스크 관리, 탄소 상쇄 기반 넷제로 달성, 자연자본 관련 재무정보 공개 등을 다룰 예정이다.

주최 한국경제매거진
일정 2023년 11월 21일(화)
장소 한국경제신문사 18층 다산홀
참고 <https://www.hankyung.com/esg/forum>





퀴즈

Q. 다음 중 안전관리체계의 핵심요소가 아닌 것은?

- ① 경영자의 의지 및 서약
- ②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
- ③ 도급 위탁운영 시 안전 책임 회피
- ④ 위험성 평가

퀴즈 응모 2023년 11월 24일(화)까지

- (1) '응모하기' 페이지(<https://quiz.assist.ac.kr>)에서 응답하시거나
- (2)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esg@assist.ac.kr) 앞으로
정답과 성함, 연락처(휴대폰 번호)를 보내주세요.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모바일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상품 발송을 위한 정보로만 활용되며, 추첨 이후 파기됩니다.



지난 호 정답자는

서○궁님, 김○곤님, 문○희님, 변○진님, 최○름님입니다.
축하합니다!!

민원상담 신청부터 결과확인까지 온라인으로 한번에 끝내기

법령·제도·행정 등 민원상담은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① 상담신청 국민신문고 ▶ 민원상담·안내
- ② 상담관지정 민원 내용에 따른 상담관 지정
- ③ 사실관계조사 관계 법령 검토 및 자료조사로 사실관계 확인
- ④ 결과확인 국민신문고 ▶ 민원상담 신청결과

